

사설

사찰 주변환경이 훼손되고 있다. 자연적인 훼손이 아닌 인위적인 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의 사찰들은 모두가 1천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전통사찰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은 자못 크다. 다시말해 훼손되는 것은 사찰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민족정신인 셈이다. 누가 우리의 아름다운 산천과 찬란한 문화를 망치고 있는가. 하나같이 세속적이기심에 물든 '업자'들이다. 골프장 아파트 위락시설 산업폐기물처리장 호텔, 이런 시설들이 왜 사찰의 주변으로 몰리고 있는가. 이제 더 이상 잠식시킬 땅이 없어서 사찰 주변으로 몰려드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환경보호 문제는 이미 '적색

의 관계법 제정을 통해 '업자'들의 이기심에 제기를 막아야 할 것이다.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사찰주변의 무차별적인 개발이 이러한 법적인 테두리가 없는데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연공원법개정안'은 우리의 자연유산과 문화재산을 축소시키는 쪽으로 방향이 흐르고 있다. 규제의 완화자체가 민주적일 수만은 없다. 강화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규정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강력히 지켜져야 한다. 차예에 종단이나 종단협의회등 불교계의 대표적 기구에서는 사찰 주변환경 보호를 위한 세밀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전문인을 통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사찰의 환경은 불교계 스스로가 강력히 지켜 나가야 한다.

불교 환경감시단 만들자

신호등'을 켜지 오래 됐다는 얘기가 있다. 사실 관련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를 '적색'으로 보고 있다. 사찰 주변에 대한 무차별적인 개발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몇가지 큰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것은 문화재와 국민정서의 보호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사찰은 수행처로서의 종교적 공간의미만 갖는 곳이 아니다. 우리 민족문화의 산실이며 전통예술의 박물관 그 자체이다. 그곳에서는 우리민족의 맥이 뛰고 있다. 때문에 사찰 주변의 개발사업은 문화재 보호와 국민의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해 '허가' 자체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최대한의 간격유지와 문화재 보호 차원의 종합 검토를 시행한 후에 허가를 하는 등

이를 위해 불교계에서 '불교환경 감시단' 등의 전문 기구를 결성할 것을 촉구한다. 이같은 전문 기구는 '적색'을 내세우는 개발업체와 정부를 상대로 불교환경의 중요성을 대변하고 무차별적인 개발을 저지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불교계는 감시단을 결성,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감시단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와 전문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만 불교계를 위한 환경감시단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안락한 삶과 중요로운 문화 공간을 지켜주는 기구의 필요성은 더 이상의 이유를 들 필요조차 없다고 본다. 망가지는 들란, 파헤쳐지는 산맥 그곳에 사찰이 없다 하더라도 끔찍한 일이 아니다.

현대 만평 박구원



이런 꼴 나올라...

열린 마당

사찰환경이 훼손 위기에 직면해 있다. 더 이상 청정도량이 훼손의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소리가 높다.

사찰환경 훼손

효림스님



금년들어 사찰주변이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다. 범사에 대해 형 아파트, 해인사 인근에는 골프장 공사가 착수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개발이 환경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삼산계곡의 파괴는 물론 도심속의 녹지가 사라지는 것이다. 여기

사찰과 불교유적지의 파괴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석산개발으로 산천이 파괴되고 수많은 불교문화유산이 훼손된 것은 관청의 허가속에 진행되었던 것이다. 앞으로 지자체가 활성화되면 이러한 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너나 할 것없이 모두가 앞장서서 감

골프장등 요인준비...국민적 보호운동

에 천년을 이어온 수행도량들도 제 모습을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렀다. 사찰 주변의 환경훼손은 자연뿐 아니라 국민정서의 황폐화까지 부른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이러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다시 복구하는데 무한의 시간까지 요구해 시간 공간

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의미한다. 더욱 한심한 것은 정부의 무분별한 허가에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국·공립공원의 면적축소와 공원내 지목변경, 건축물 개축등의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자연공원법개정안'을 입법에

고 있지만 성과는 아직 요원한것 같다. 한번 오염된 환경에 소요되는 재원과 시간은 세상 거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다. 사찰 주변의 환경문제는 여기에 사찰과 종단의 무성의가 한몫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사찰을 알리는 표지판이 통일되어

고영호 부회장



국내뿐만 아니라 전지구적으로 환경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정치적 분열, 종교간 갈등, 인종차별로 인한 테러 등 세계의 상황 못지않게 환경문제는 이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수준에까지 도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사찰 주변의 환경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지금까지 사찰이라고 하면 환경오염 또는 훼손에 있어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선 대사찰의 경우 자연히 찾는 신도수가 많기 때문에 공양후 버리

민족의 성지...사찰·종단 보존에 나서야

는 음식 쓰레기가 만만치 않아 이를 처리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형편이다. 또 식기를 무분별하게 세척하는 바람에 주변 계곡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요즘은 대부분의 사찰에서 도스님은 물론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계몽활동을 벌이

있지 않고 좋지않은 모양새로 아무곳이나 설치되어 있다. 그것이 도리어 환경을 훼손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표지판이 질서있게 설치되어 있으면 사찰을 찾는 방문객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고 있지만 성과는 아직 요원한것 같다. 한번 오염된 환경에 소요되는 재원과 시간은 세상 거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다. 사찰 주변의 환경문제는 여기에 사찰과 종단의 무성의가 한몫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사찰을 알리는 표지판이 통일되어

◇사찰환경 훼손 주요 일지

89년	전북 무안 송달산 법전사 인근 골재생산
91년	경북 가야산 해인사 국립공원에 41만평 골프장 허가
92년	충북 제천 송화산 강천사 인근 석산개발, 충북 증평군 보련산 일대 석산개발로 산내 보련사, 인룡사등 불교유적지 훼손
93년	서울 봉은사 앞에 은봉고층빌딩 신축허가
93년	경남 군정 의림사 경내 저수지 확장공사 강행 의림사 침수위기, 사찰 진입로 훼손
94년	경북 경주군 감은사지 인근에 산업폐기물 처리장 건설 추진
95년	부산 범어사 앞에 고층아파트 건립추진 파주 보광사 입구 호텔 건립

시론

남북 종교교류 과속은 곤란

조국평화통일추진 불교인 협의회가 추진하는 '남북·해외불교도 8·15 합동법회'와 조계종 총무원장 율스님의 방북 추진은 2천만 불교인은 물론 통일을 바라는 온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염원이 어느 때보다 무르익고 있는 때에 비정치적 분야에서 통일추진 노력을 선도적으로 해야할 책무가 있는 불교계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또 남북간의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통일추진의 장이 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불교계라는 점에서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고 있다.

분단 50년이란 민족적 결빙기가 서서히 해빙기를 맞고 있다. 분단기간 동안 남북은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적 논쟁 속에서 자기이념만 고집시켜 나갔다. '공산'이냐 '자본'이냐 하는 이데올로기적 논쟁이 민족의 동질성 회복보다 더 큰 덩치로 우리의 의식을 지배해왔던 것이 지난 50여년 분단한국사의 모습이다. 다시 말

의 변형된 불교문화에 남과 북이 따로 있다. 또 동교의 침입과 임진왜란때 팔만대장경을 조성하여 부처님의 힘으로 동교의 침입을 막아보려고 했던 민족적 의지라든가, 승법을 일으켜 민족의 위기에 대처한 불교계의 역사의 지에 남북이 따로 없었다.

북한개방 돕는 물꼬 터야

한국사의 긴 역사전행 과정속에서 남북이 뿌리깊게 하나가 돼 있는 분야가 바로 불교라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현실도 마찬가지다. 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북한사회이지만, 6.25 이후에도 북한당국은 북한내 주요 사찰을 국가예산으로 꾸준히 보존, 복원 작업을 해 왔다.

또 현재 1만여명의 불교도가 신행활동을 하고 있으며, 50여곳의 사찰에서 실제 법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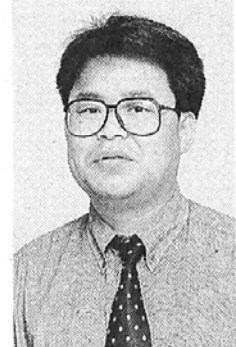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에 살고 있는 우리민족의 가슴 깊은 곳에 불교의 향내가 짙게 깔려 있다는 것이다. 오랜기간을 거치면서 민족의식을 형성해왔던 '불교적 정서'가 북한인의 가슴에 뿌리 깊게 깔려 있을 것이다.

불교계는 남북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이러한 점들을 깊이 살펴 특색있는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

천주교와 기독교인사 8명이 북한 방문 승인을 받아 5월말쯤 1주일 예정으로 북한을 방문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모두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초청을 받았다. 북한 체류중 추진할 계획을 보면 천주교측은 나진 선봉지역에 2백평상 규모의 병원건립등 의료선교쪽에, 기독교측은 교회건립 및 기독교 유적지 복원문제에 각각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불교계도 광복절 방북인이 불교교류사업으로 북측 사찰복원을 위한 불구(佛具)제작 등을 북측에 제의, 북측으로부터 깊은 관심을 받았다. 북한의 현 경제적 어려움을 염두에 둔 남북종교계의 제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민족적 동질성 회복차원에서 불교계는 보다 거시적 시각으로 북한 불교계의 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남북종교인들의 교류나 접촉에 있어 법적규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북한의 개방을 돕는 종교교류 쪽으로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특히 불교계는 민족적 정서면에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는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 교류 초기에 이러한 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연구해서 앞서가는 남북 종교교류의 길을 신중하게 걸음으로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동윤 (영남일보 논설위원)

이제 이념논쟁은 구겨져 빛바랜 옷일 뿐이다. 세계는 이미 탈이데올로기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안타깝게도 남북의 국가경영 체제에서 아직 이데올로기라는 허물을 완전히 벗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의 의식은 점차 상층에 비해 역사적 성숙성을 확보하고 있다. 민족의 동질성회복이 그 어떤 이념보다도 소중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남북의 종교 문화교류는 이루어져야 한다. 동질성 회복이란 차원에서 불교는 단연 통일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분야이다.

남북의 공통분모 불교

북한도 이제 종교인들을 적극 통일전선 구축에 활용하려고 협동을 지원하고 있다. 때문에 남북종교교류는 더욱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다고 남북종교교류를 나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북한의 대남정책과 종교전력전술을 남한의 종교인들은 외면해서는 안된다. 또 우리 종교계가 북측과 개별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것도 문제다.

이번에 광복절 미주 대표가 방북하여 우리의 '종단합' 쪽으로 교류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불교가 전래된 삼국시대이후 1천6백여년동안 민족의식을 지배해 왔던 남북의 공통분모가 있다면 바로 불교다. 단순한 신앙차원에서 공통분모가 아니다. 역사의 영예와 치욕을 함께 해 왔다. 신라의 찬란한 불교문화와 고려

공고

법인 설립 허가 - 社團法人 大輪佛敎文化研究院

상기 법인은 1995년 3월 22일자로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취지문

지구촌 국가들은 모두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자국민의 생존권을 걸고 몸부림치고 있다. 또한 물질문명과 과학안능 및 이기주의 사조로 인간성-상실시대를 맞으며 갖가지 인재(人災)를 당하고 있다.

인간존엄성과 윤리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이상과 현실이 전도되고 아집과 갈등, 이기와 폭력 및 무책임 행위로 국가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이에 종단을 초월, 불조와 대륜화상의 특수사상을 연구·선양하여 깨침을 향한 정법교육 및 포교와 대비실천을 통한 깨침의 생활화, 사회화, 호국화 기풍을 진작하고 자연환경호보 및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성 및 도덕성 회복을 일깨우고 각자가 스스로 청정본성에서 참 가치관을 세우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시대적 사명인 국민정신 문화창달 확립과 인격을 완성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위대한 민족성과 주체성을 확립하여 부강한 자유민주 정의복지국가 발전과 조국의 평화통일, 인류평화구현에 기여하고 나아가 이상적인 불국정토를 실현하는 데 그 취지를 둔다.

정관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대륜불교문화연구원(이하 본 "법인")이라 한다.
- 제2조 (소재지)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3조 (목적) 본 법인은 종파를 초월하여 불조의 특수사상을 연구, 선양하여 깨침의 생활화, 사회화, 호국화를 함으로써 수승한 민족의 정신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여 자유민주 복지국가건설과 조국의 평화통일 및 인류평화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목적사업) ①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한다.
 1. 불조 및 대륜화상의 특수사상 연구사업
 2. 세계불교문화의 연구 및 통일사업
 3. 불교정신문화강화 및 포교 포교사업
 4. 불교지도자 육성 및 연구사업
 5. 국제간의 불교문화 교류사업
 6. 불교사상연구 성과를 출판사업
 7. 회원간 상호 부조 및 친선 교류사업
 8.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제4항의 목적사업 수행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회원

- 제5조 (자격 및 가입절차) ① 본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창립취지 및 목적사업에 찬동하는 착한 영의한 승려 및 대륜문헌과 건립사 그리고 사회 유력인사로 한다.
-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본 법인의 회원이 된다.
- 제6조 (권리)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법인운영에 참여할 권리
 2. 선거 및 피선거권
 3. 기타 정관에 규정된 권리

* 이하 정관 제8장 제45조 부칙 2조는 생략

임원명단

- 이사장 德菴 安典德
- | | | | |
|--------|---------|------|--------|
| 사무총장 | 無空 徐甲生 | 감사 | 鐵華 徐孝欽 |
| (상임이사) | | 운영이사 | 梵海 姜大龍 |
| 이사 | 雲齋 李英茂 | 운영이사 | 普經 文富成 |
| 이사 | 道庵 朴性道 | 운영이사 | 梵山 盧 菴 |
| 이사 | 慧日 康富重 | 운영이사 | 慧月 沈貞子 |
| 이사 | 常虛 趙成敏 | 운영이사 | 李慈道 |
| 이사 | 法蓮 鄭承敏 | 운영이사 | 金大心 |
| 이사 | 高담 李哲雨 | 운영이사 | 俞夏雲 |
| 이사 | 常默 吳光烈 | 운영이사 | 鄭護賢 |
| 이사 | 東俊 安東俊 | 운영이사 | 김명철 |
| 이사 | 明心月 朴明順 | 운영이사 | 홍복술 |
| 감사 | 蕭巖 洪淳鏡 | 운영이사 | 智弘 劉泰煥 |

사단법인 대륜불교문화연구원

주사무소 : 서울시 종로구 시간동 87
전 화 : 733-7274, 733-3733